
2023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

2022. 12.



해양수산부

목 차

I . 수립 배경	1
II . 2022 추진성과 및 평가	2
III . 2023 여건과 전망	5
IV . 2023 시행계획 추진방향	6
V . 2023 세부 시행계획	7
1. TAC(총허용어획량) 기반 자원관리	7
2. 수산자원의 회복	8
3. 수산자원 조사 · 평가	10
4. 연근해 서식 · 생태환경 개선	11
5.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문화 확산	12
VI . 투·융자 계획	14

I. 수립 배경

□ 수립 배경

- 변화된 어업환경을 고려하여, 수산자원 관리를 개선·발전시키기 위해 5년 단위 「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*」을 수립·추진중

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동·서·남해와 제주 부근해역(내수면 제외)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 기본방향, 자원조사·평가체제, 수산자원 회복계획, TAC 등에 대한 계획 수립

- 「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(’21~’25)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’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(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8조제1항)

□ 「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」 주요 내용

-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,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5개 주요과제, 13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
- TAC(총허용어획량) 참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, 스마트 TAC 관리 인프라 구축 등 TAC에 기반한 수산자원 회복·관리 정책 추진
- 개별 어종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수산자원 조사·평가 체계를 확립하고, 연근해 서식·생태 환경을 조성
- 민간의 자율과 참여가 함께하는 수산자원 정책 추진

< 추진과제 : 5개 주요 추진과제, 13개 세부 추진과제 >

주요 추진과제 (5개)		세부 추진과제 (13개)	
1	TAC 기반 자원관리	① TAC 참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	② 스마트 TAC 관리 인프라 구축
2	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	① 감소·고갈 어종 단계적 맞춤형 관리	②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
		③ 수산자원회복계획 실효성 제고	
3	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·평가	① 생태계기반 자원평가 활성화	②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확충
4	연근해 서식·생태환경 개선	① 생태계 기반 산란·서식장 조성	②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
		③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관리 합리화	
5	참여형 수산자원 보호문화 확산	①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레저문화 확립	②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
		③ 자율관리형 수산자원보호 촉진	

II. 2022년 추진성과 및 평가

1 주요 성과

①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

- (TAC 확대) 상업적 이용이 높은 갈치 등 3개 어종을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, 근해안강망 등 3개 업종을 추가('22.7)

* ('21) 12개 어종, 14개 업종 → ('22) 15개 어종(갈치, 참조기, 삼치 추가)
17개 업종(근해연승, 근해안강망, 서남해구쌍끌이)

- (TAC 관리 강화) TAC 설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규평가 기법* 도입, TAC 제도 운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TAC 관리 매뉴얼 마련('22~)

* 체장 및 잉여생산량 기반의 자원평가모델 개발, 평가시스템은 코드형에서 GUI로 전환

② 수산자원 조사·평가 고도화

- (자원 조사·평가 확대) 자원평가 대상종을 확대하고('21. 55종 → '22. 60종), 생태계 기반 위험도 평가모델*을 이용한 평가체계 고도화

*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어종·어업·생태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

** ('22) 동해권역 → ('23) 남해·제주권역 → ('24) 서해권역 → ('25) 전체해역

- (정밀도 제고) 연속적·입체적 난자치어 조사*로 정밀한 산란장 지도 작성, 음향값 조사 등 첨단 조사기법을 도입**하여 자원조사 정밀도 향상

* 첨단 난자치어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연속된 표층 서식 어종과 목표종의 수층별 출현밀도 확인

** 음향값 규명 : ('22) 멸치, 전갱이, 청어 / 바이오로깅 : ('22) 대게·명태·대문어·꼼치

- (자원조사 인프라 확충) 노후조사선의 첨단장비·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추진('17~)으로 자원조사·평가 역량 강화

* 조사선 건조 척수(누계): ('18) 2척 → ('19) 3 → ('20) 4 → ('21) 4 → ('22) 4 (그 외 3척 건조 중)

③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서식 환경 개선

- (공급 거점 확대) 바다숲, 연안바다목장 및 산란·서식장 조성 등 연안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공급 거점 확대
 - * 바다숲 조성면적(누계, km²): ('17) 152.52 → ('19) 214.9 → ('21) 266.44 → ('22) 291.8
 - * 바다목장 조성 개소(누계): ('17) 30 → ('19) 36 → ('21) 45 → ('22) 50
 - * 산란·서식장 조성 개소(누계): ('17) 6 → ('19) 14 → ('21) 23 → ('22) 29
- (생태계 복원) 바다숲 조성을 통한 바다사막화 해소로 최근 5년간 해조류 생체량은 평균 190.9%, 종다양성은 전년 대비 108.2% 증가
 - * 전국 연안해역 갯녹음 면적 '16 154.5km² → '21 141.1km² (9.14%(13.3km²) 감소
 - * 5년간(2018~2022년) 해조류 평균 생체량(g/m²): 조성전 515 → 조성후 983
 - * 5년간(2018~2022년) 종다양성 지수: '18 2.20 → '19 2.24 → '20 2.29 → '21 2.44 → '22 2.64
- (자원 회복) 수산자원 증대사업(바다목장, 산란·서식장)으로 단위노력당 어획량(CPUE)은 전년 대비 128.4%, 비조성해역 대비 500% 증가
 - * 전년대비 CPUE: 바다목장(어로형) 평균 129.5%, 산란·서식장 평균 127.3% 증가
 - * 비조성해역 대비 바다목장 CPUE: 조성해역 14.5kg/척, 비조성해역 2.9kg/척

④ 국민이 공감하는 수산자원관리 확대

- (현장발굴단 운영) 민간 주도의 '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'을 구성·운영*하여 어업인 중심의 자원관리 정책 기반을 마련
 - * 수산 관련 산·학·연 및 시민단체와 지역별 수협조합장협의회 회장 등 22명 위촉, 5개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(460여명 참석)하여 어업인 의견(232건) 수렴
- (소비자 참여) 어린물고기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*과 생산·유통업체 합동단속**을 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및 어린물고기 유통 근절에 기여
 - * 아이디어 공모전, 전시회(3건), 민관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(2회) 등
 - ** 기간 / 대상 : '22. 6. 20. ~ 7. 1.(12일간) / 어린청어 유통·판매 업체 67개소
- (건전한 낚시문화) 낚시명예감시원* 활동, '낚시해(海)' 서비스 및 전문교육** 과정 운영 등 낚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
 - * 명예감시원 100명('22.2~'22.11), 점검 413건, 계도 321건, 홍보 232건 등
 - ** (보수교육) 약 7천명, 4시간 교육 실시, (신규·재개자) 약 4백명, 21시간 교육 실시

① 수산자원관리 제도의 수용성 확보 필요

- (중복 규제) TAC 중심으로 자원관리를 전환 중이나 기존 금어기·금지체장 등의 규제는 유지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
 - * TAC와 금어기·금지체장 중복적용 12개 어종
 - 수온변화 등 산란생태 변화로 인해 포획금지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기존 금어기·금지체장의 재검토 요구
- (혼획문제) 비의도적인 혼획물은 해상방류가 원칙이나, 방류 과정에서 대부분 폐사하는 등 자원보호 효과가 낮아 규제 수용성 저해

②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사업 추진 필요

- (TAC) 참여 어선은 확대('21, 1,450 → '22, 2,430척)되었으나, 조사원 확충 지연 등 어획량 관리가 어렵고, 참여어업인 정책지원 확대 필요
- (자원조성) 자원조성사업(국가)과 사후관리(지자체) 주체의 이원화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, 사후관리 부재로 기능 및 효과 유지가 곤란
- (자율관리어업) 초기 자율관리어업은 양적 성장 위주의 노력으로 '15년 이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성장동력에 한계 발생
 - * ('01) 63개소 → ('11) 932개소 → ('15) 1,131개소 → ('22) 1,120개소
- (자원 조사·평가) 자원평가 정확도가 낮고('22년 평가대상 60종 중 5단계 추정방법* 27종), 자원평가의 투명성·신뢰성에 대한 외부 비판 제기
 - * 5단계 산출방법은 연도별 어획량만을 사용하는 자원평가로 정확도가 가장 낮은 추정방법

③ 어업인과 일반 국민 간의 갈등 심화

- 해루질, 수상레저 활성화로 비어업인(레저인)과 어업인간의 갈등*, 낚시 조획량 및 쓰레기 증가로 낚시인과 어업인간 갈등** 심화
 - * 제주 관내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를 제한(제주도 고시, '21.4)
 - ** 국립공원공단에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여수 거문도 갯바위 출입통제('21.9~'22.10)

Ⅲ. 2023년 여건과 전망

□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정책 수요 증가

- (자원량) '80년대 평균 152만톤에서 '20년 93만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는 등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자원량 지속 감소 추세*
- * 평균 어획량(만톤) : ('80년대) 152 → ('90년대) 137 → ('00년대) 115 → ('10년대) 102
'20년 어획량 93만톤은 최대 어획량(173만톤)을 기록했던 '86년에 비해 46.2% 감소
- '22년 주요 60개 어종의 어종별 분석결과 자원수준('99년 이후 자원 상태)은 낮음 9종, 자원동향(최근 5년간 자원변동)은 감소 11종으로 분석
- (정책적 대응) TAC 기반 자원관리로 정책 전환을 위해 TAC 확대와 금어기·금지채장 등 규제 개선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,
 - 규제 강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책 대상자 반발이 증가하고, 어촌인구 고령화로 자율관리어업 등의 동력은 약화
- (기후정책) 2050 탄소중립 선언,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계 필요
 -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가 강조되고 있고,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바다숲의 역할이 증대

□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·관리의 중요성 부각

- (세계 수산동향) '18년 어업활동을 통한 생산량은 9,640만톤이나 '9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된 상황(FAO, '20년)
 - MSC 인증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윤리적 수산물 소비를 강조
- (국제사회 대응) UN은 '2030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'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중요성 부각
 - * UN SDGs 14번 목표 : 해양과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
 - FAO, OECD 등은 COVID-19의 영향으로 과학자원 조사 프로그램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비대면 수산자원 조사·생산 체제 구축을 권고
 - 인접국가와의 어업협상 및 CPTPP 등 국제협상 시 수산분야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정밀 자원조사 및 과학적 자원관리 요구가 예상

IV. 2023년 시행계획 추진방향

비 전	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·이용
23년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대상어종 생산량(%) : (‘20) 35 → (‘22) 40 → (‘23) 43 → (‘24~‘25) 50 ■ 수산자원관리 체계 개편 : (現) 다양한 규제로 관리 → (改) 산출량 중심으로 관리

주요 정책	
① TAC 기반 자원관리	① TAC 대상 확대 ② TAC 제도 고도화를 통한 의무화 기반 마련 ③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지원 확대
② 수산자원의 회복	① 금어기·금지체장 실효성 제고 ② 어린물고기 보호 및 혼획물 처리 방안 검토 ③ 자원감소 어종 회복프로그램 운영 ④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
③ 수산자원 조사·평가	① 수산자원 평가 고도화 ②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확충
④ 연근해 서식·생태환경 개선	① 바다숲 조성 확대 및 블루카본 인증기술 개발 ② 지역특화형 산란·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
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문화 확산	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 제도 개선 ②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산 ③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낚시 관리 선진화 ④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

V. 2023년 세부 시행계획

1 총허용어획량(TAC) 기반 자원관리

① TAC 대상 확대

- (업종/해역) 일부 업종과 특정 해역에만 부분적으로 TAC를 적용*하는 어종에 대해 전체 업종과 적용해역을 점진적**으로 확대('23.7)
 - * (붉은대게, 도루묵) 근해어업 → 연안어업 / (꽃게, 참홍어) 일부 해역 → 연근해
 - ** 어선별 어획실적 조사 → TAC 적용 대상 및 우선순위(업종) 결정 → 단계별 적용
- (TAC 어종) 연근해어업 생산 비중이 높은 멸치에 대해 TAC 적용을 추진하되,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('22~'24)
 - * 시범사업 기간 중 생물학적 자원조사 등을 병행하여 자원평가 정확성을 제고

② TAC 제도 고도화를 통한 의무화 기반 마련

- (제도 고도화) '27년 TAC 전면 적용을 목표로 ITQ 제도와 TAC 기금* 도입 및 TAC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「수산자원관리법」 개정 추진('23.12)
 - * (예시) TAC 일부를 공매로 기금 조성, 어획부진 시 어업인의 배분량을 기금으로 구매
- (신뢰성 제고) TAC 설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자원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를 통한 검증 절차* 마련
 - * 어종별·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검증단'을 운영

③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지원 확대

- (중복규제 해소) TAC와 타 자원관리 정책(금어기·금지체장 등)의 효과를 분석하여 중복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('23.12)
 - * TAC 어종 조업 시에만 관련 조업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어종 조업 시에는 규제 유지
- (지원 확대)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과 경영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
 - * 수산자원보호 직불금('23년 117억원) TAC 참여 어업인 경영자금('23년 105억원)

① 금어기·금지체장 실효성 제고

- (규제 합리화) 어획량이 적거나, 양식이 활발한 어종 등 금어기·금지체장의 실효성이 낮은 어종을 대상으로 규제 폐지·완화('23.上~)
 - * 금어기(44건), 금지체장(41건) 총 85건 중 1/3 수준인 30건 이상 폐지·완화 추진
- 산란기 변동 등 환경변화와 어업인의 개정수요가 있는 어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('23.上~)
- (지자체 역할 강화) 정착성 수산동식물(해조류·패류)의 금어기·금지체장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('23.上)
- (포획금지구역 해제) 곰소만·금강하구의 수산자원조사('19~'22)를 바탕으로 해당 해역의 포괄적 금어기(4.1.~10.31.) 해제 추진('23.上~)

② 어린물고기 보호 및 혼획물 처리 방안 검토

- (어린물고기 남획방지) 주요 위판장의 어린물고기 포획실태를 심층 조사*하고, 업종별 어린물고기 보호 권고안을 마련('23.上)
 - * 심층조사 계획 : ('21) 동해권 → ('22) 남해권 → ('23) 서해권 → ('24) 제주권
- (혼획 실태조사) 「수산업법」·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의한 업종별 혼획 실태(저인망어업) 및 해상투기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 조사('23.~)
 - 근해안강망 어업자협약 모니터링 자료*('20.10~'23.6)를 활용하여 어린물고기의 생사료 판매실태 분석('23.下)
 - * 생사료 어획물의 종조성·미성어 비율, 생사료 매입업체·매입량·판매액 등

③ 자원감소 어종 회복프로그램 운영

- (맞춤형 관리) 회복대상종을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중점연구종·모니터링종·해역관심종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관리(총 25종)
 - * 중점연구(8종) : 대게·대문어·멸치·병어류·살오징어·주꾸미·참문어·키조개
 - * 모니터링(15종) : 갈치·개조개·갯장어·고등어·기름가자미·꽃게·낙지·대구·도루묵·말쥐치·명태·오분자기·옥돔·참조기·참홍어
 - * 해역관심(2종) : 가시발새우·임연수어
- (조사확대) 회복대상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집중조사를 통해 어업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회복권고안 마련
 - * 수산자원 회복권고안 마련 예산 : ('22) 873백만원 → ('23) 1,115백만원

④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

- (혼획 저감) 안강망, 트롤, 정치망, 자망 등 어구의 혼획저감 장치개발('23~)
 - * (안강망) 기개방 어구 2차 개선 / (자망) 침강형 모릿줄 / (트롤) 탈출 장치 등
- (정책협력 강화) 고래생태·보전, 고래문화 관련 정책방향 수립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3.上)
- (통계관리 개선) 고래 통계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관간 신속한 자료 공유 등 관리체계 개선
 - 고래류 처리확인서 작성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, 처리확인서 작성 항목을 재검토*하여 필수 항목 위주로 개선('23.上)
 - *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항목 삭제, 어구종류 등의 정보는 작성항목에 포함
 - 고래류 위판정보 입력 오류·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판시스템을 개선*하고, 위판담당자 교육 지속 실시
 - * 위판 금지된 고래류 입력 방지, 정보 누락 방지 등 위판시스템 개선('23.)
- (피해지원) 조업 중 고래 혼획으로 인한 어구피해와 조업손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사업 추진 방안 마련
 - * 최근 10년간 업종별 고래 혼획 비율 및 어업별 어구피해 등 실태조사

① 수산자원 평가 고도화

- (자원평가 확대)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을 확대('22. 60종→'23. 65종)하고,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*을 통해 해역별 평가**를 실시

*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·어업·생태계 위험도를 종합 평가

** ('22) 동해권역 → ('23) 남해·제주권역 → ('24) 서해권역 → ('25) 전체해역

- (평가단계 상향) 어종별 생태특성(체장, 연령 등)을 반영하고 수협 조업정보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평가단계를 상향*(4단계 이상)

* 1~4단계 평가대상 종 ('22) 33종 → ('23) 38종 (現5단계 5종을 4단계 이상으로 상향)

- (외부검증 확대) 수산자원 조사·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 검증*을 확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

* TAC 워킹그룹 및 대외기관(대학, 해외 전문기관 등)을 통한 외부전문가 검증

②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확충

- (수산과학조사선 건조) 노후 조사선을 첨단장비를 탑재한 선박으로 대체*하여('23. 2척 준공), 해양생태계 변동에 따른 자원조사 역량 강화

* 수산자원조사선 대체건조(누적) : ('19) 3척 → ('22) 준공 4, 건조 중 3척 → ('23) 준공 6, 건조 중 1척

- (첨단조사기법 활용)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*하여 조사의 정밀도를 제고하고, 음향조사를 활용하여 회유성 부어류** 조사 확대

* 내만으로 산란회유 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기내 행동 특성 연속 모니터링

** 고등어 산란기(5월) 현존량 조사 확대, 어종식별을 위한 음향특성치 연구 병행(정어리, 전어, 도루묵)

- (대외협업) 지자체 수산연구소·지역거점대학과 연계하여 지역별 수산자원 조사·평가 협업체계를 구축('23)

* 수산자원 조사·평가 관련 자료(raw data)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검증

① 바다숲 조성 확대 및 블루카본 인증기술 개발

- (조성확대) 해역 특성에 맞는 바다숲 25km²(17개소, 누적 316.8km²) 조성*, 아열대성 해조류 시범조성과 천연해조장 관리를 통해 친환경 조성기법 확대
 - * '27년까지 440.8km² 조성 → '30년까지 540km² 조성 달성(국정과제41)
- (블루카본) 바다숲 조성용 친환경 인공구조물 개발 연구(~'25) 및 탄소 흡수능력 산정기술 개발 연구(계속) 등 바다숲 관련 블루카본 사업 확대
- (상생협력) 국가·지자체·민간이 참여하는 '바다숲 상생협의체'를 운영*(23.下)하고, 국민이 쉽게 찾는 '보이는 바다숲' 설치**(23.下)
 - * 어업인 바다숲 조성 참여(갯닦기), 기업참여 공익캠페인에 바다숲 홍보 추진 등
 - ** 국립해양과학관(울진), 아쿠아리움 및 해양수산연구시설 등에 교육·홍보 자료로 활용

② 지역특화형 산란·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

- (지역특화형 사업) 지역특화 어종의 산란·서식장 조성* 확대, 해역별 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 증대사업 통합방안 검토(23.上)
 - * 지역특화 산란·서식장 조성 : ('22) 29개소 → ('23) 33개소
- (사후관리 강화) 조성이 완료된 연안바다목장(누적 50개소)의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(23.下)
 - 품종별 자원조성·관리 매뉴얼 개발하고, 산란·서식장 조성후 어업인 자율관리 프로그램 확대 등(계속)
- (종자방류 효과 제고) 방류종자 인증 품종(넙치 1종 → 2종)을 확대하고, 방류종자인증제 세부기준 마련(23.上) 등 제도 정비

③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

- (허용행위 확대) 오·폐수 유입차단 등 어장환경관리와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가 가능한 경우 '해상유어장' 등 행위 허용(23.上)
 - * 해상유어장 정의, 시설기준 등 신설을 위해 「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개정

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 제도 개선

- (제한기준 구체화) 현재 포획·채취 방법 등만 제한하던 것을 수산자원의 종류, 마릿수, 시기 등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
 - * (현행) 수산자원 포획·채취 방법·금어기·금지체장 → 종류·마릿수·시기 추가
- (지역특성 반영) 다양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 - * 수산자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례로 비어업인 포획 제한기준을 설정

②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산

- (어선어업 참여 확대) 연근해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및 업종별로 권역화하고, 어선어업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활성화
 - * 어선어업 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 실시('23.1~6) 및 '23년 하반기 개편안 마련
 - 자율관리어업 조사원을 통하여 전국 공동체 구성·등록 현황, 공동 생산·판매 현황 등을 실태조사* 하고, 내실화 방안을 마련('23.)
 - * 전국 공동체 1,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
- (우수공동체 육성) 공동체 교육·컨설팅을 강화하고,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수공동체 선정·지원*을 확대
 - * 우수공동체(평가점수 600점 이상) : '21. 374개 → '22. 390개 → '23. 400개
- (공동체 협력 강화) 어업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'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' 개최하고, 선진공동체 정보교류 및 교육·홍보 활성화
 - * '23.11월중 / 고양 킨텍스 / 기념식, 정부포상, 우수사례 발표, 토론 및 교육 등
 -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함께 하는 날(가칭)*을 지정하여 전국단위로 어장청소, 잘피 숲 조성 등 추진하여 수산자원 관리·조성 홍보
 - * 바다식목일, 바다의 날 등 기념행사 시 연계 행사로 추진

③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낚시 관리 선진화

- (낚시어선 어획량 조사) 낚시 기초통계 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낚시어선의 어종별 마릿수, 무게 등 어획량 조사 추진(연중)
 - * (조사기간/주기/방법)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/ 매월 / 면접조사
- (낚시·여가 특구) 낚시·여가 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타법에 따른 특구,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('23.上)
 - * (국정과제-73) 풍요로운 어촌, 활기찬 해양, 실천과제 7.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

④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

- (캠페인 확대)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'치어럽 캠페인'을 확대*하고, 지자체, 어업관리단 등과 합동으로 유통·판매업체에 대한 홍보 강화
 - * 지속가능 지역축제 개선 공모전, 온라인 소비자 참여채널 운영, 전시회 운영 등
- (소통 워크숍) 정부, 소비자단체, 전문가,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'민관 수산자원관리 협의체'를 활성화하고, 소통워크숍 개최(연 2회)
 - *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소비자참여 수산자원관리 추진방향 마련
- (소비자 참여) 유령어업 예방과 수산자원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참여 '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' 공모전 개최(웹툰 등, '23.7~)
 - *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연계한 어린물고기 보호 이벤트 추진
- (낚시 홍보) 낚시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낚시방법, 안전수칙, 에티켓 등 동영상 시리즈 제작 및 유튜브 홍보(연 2회 이상)
 - * 우리부 유튜브 채널, '어선오션 TV' 및 낚시정보종합포털 '낚시누리'(www.naksinuri.kr) 업로드
- (비어업인 포획·채취 캠페인)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합리적인 레저 활동 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과 상생하는 캠페인 추진(연중)
 - * '어선오션 TV(우리부 유튜브)'에 홍보 영상 게재, 비영리법인 등 관련 기관(단체)과 현장 캠페인

VI. 투·융자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별	재원별	연차별 투자액		
		2021	2022	2023
총 계	계	119,429	131,741	120,555
	국 비	109,979	121,241	110,055
	융자	9,450	10,500	10,500
1. TAC(총허용어획량) 기반 자원관리	소 계	13,455	14,953	15,139
	국 비	4,005	4,453	4,639
	융자금	9,450	10,500	10,500
2.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	소 계	1,965	2,062	2,187
	국 비	1,965	2,062	2,187
3.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·평가	소 계	20,673	28,531	16,185
	국 비	20,673	28,531	16,185
4. 연근해 서식·생태환경 개선	소 계	73,826	76,907	77,353
	국 비	73,826	76,907	77,353
5.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	소 계	9,513	9,288	9,691
	국 비	9,513	9,288	9,691